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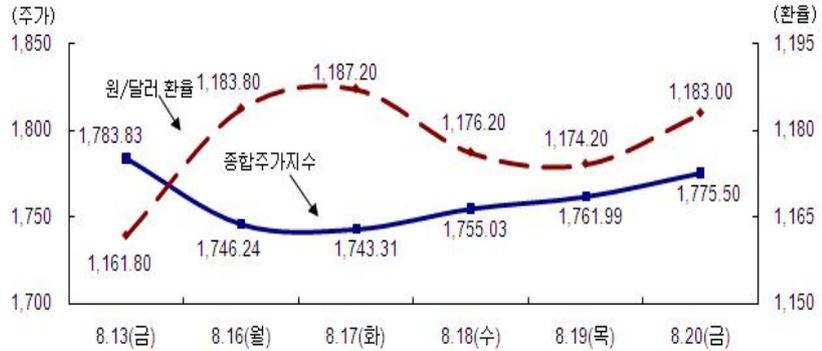
10-31(통권 411호)  
2010.8.20



- 잠재성장을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집권 후반기 중점 경제정책 추진방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3~8.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2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2072-6213, dykim@hri.co.kr)  
 : 조 호 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집권 후반기 중점 경제정책 추진방향

#### ■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8~9% 대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대 후반까지 하락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국내 주요기관들도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와 인력 활용이 미흡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 둔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와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들도 심화되고 있다. 둘째, 취약한 대학교육과 기업의 훈련시스템으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 자본의 형성이 취약하다.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순위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2006~2009년 1.4%로 떨어졌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를 제외하곤 부진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동생산성도 2000년 66.1%에서 2007년 44.6%로 하락했다. 다섯째, 내외수 단절 심화와 선순환 구조의 약화이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더디게 하여 수출이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켰다. 여섯째,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 기능도 약화되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 위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증가와 산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IMF 이후 외국인의 빈번한 단기 투자자금 유출입도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실패현상이다. 9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낮아지고 대기업과 일부산업 분야로의 실패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이다. 낮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이 정권의 위축, 계층 기업 지역간 양극화, 남·북한간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고용창출과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2%p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구성요소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투입의 증대 차원에서, 펄프 잡과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혁신, 세계 10위 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 두뇌유출 방지와 해외두뇌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을 촉진 하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분야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복원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해야 한다. ②연구개발 패러다임을 2등에서 1등 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투자분야의 실패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③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신뢰수준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 <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li> <li>·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융위기 이전(2006~08)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li> <li>-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0년 이후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음</li> <li>· OECD는 2011년 이후 국내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li> <li>- 1980년대 이후 국내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3%대로 떨어짐</li> <li>· 잠재성장률이 80년대 9~1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대로 하락</li> <li>·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은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li> </ul>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li> <li>- 취약한 대학교육 및 훈련시스템</li> <li>-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li> <li>-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li> <li>- 내·외수 단절 심화로 선순환 구조 약화</li> <li>-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li> <li>-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li> <li>-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li> </ul>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노동투입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li> <li>·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투자 확대</li> </ul>	
자본스톡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li> </ul>	
총요소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li> <li>·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li> <li>·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li> </ul>
	연구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의 패러다임(1등 전략) 전환과 효율성 제고</li> </ul>
	경제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사회, 신뢰,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li> <li>·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li> </ul>

## 1. 잠재성장률 하락의 추이와 전망

○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sup>1)</su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폭이 더욱 크게 확대됨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80년대 고성장기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81~85년까지 평균 3.3% 성장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90년대 중후반기에 IT 산업의 성장으로 1996~2000년까지 평균 4.3%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0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음
  - 일본, 독일, 영국 등도 80년대 비교적 높은 성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6~2010년에는 평균 0%대로 떨어짐
  -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80~90년대 평균 9~10%대의 고성장에서 90년대 7~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중반까지 4.5%, 후반기에는 평균 3.5%로 하락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더욱 크게 저하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0.4%(전기대비 연율)에서 2009년 -2.6%로 떨어졌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의 2009년 경제성장률도 -4.9%로 크게 하락
  - 반면, 한국은 기조효과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으로 2009년 연간성장률이 0.2%로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2010년 들어서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기간별 경제성장률 평균 추이>

(%)

	'81~'85	'86~'90	'91~'95	'96~'00	2001~'05	2006~'10
미 국	3.3	3.2	2.5	4.3	2.4	1.2
일 본	3.1	4.8	1.5	1.0	1.3	0.0
독 일	1.2	3.5	2.2	2.0	0.6	0.6
영 국	2.1	3.3	1.7	3.4	2.5	0.5
한 국	9.0	10.4	7.9	5.4	4.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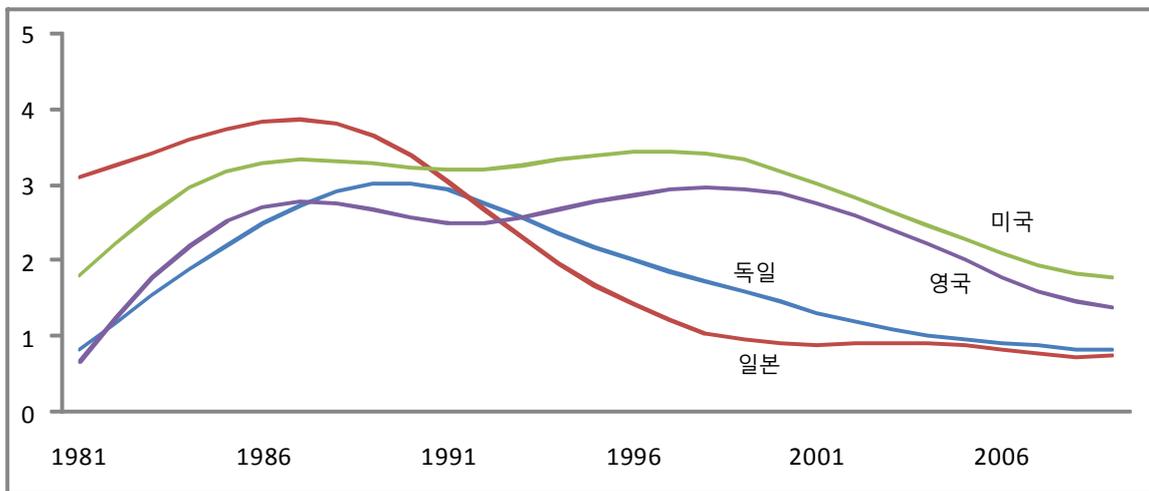
자료: IMF.

주: 1) 2010년은 IMF의 각국 성장률 전망치임.

1) 잠재성장(Potential GDP)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및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 GDP수준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차이인 총수요갭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잠재GDP는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
  -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중반부터 01년까지 3%대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들어 2%대로 하락하였고 금융위기로 1%대로 떨어짐
  - 독일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3%대를 보였으나 이후 1%대로 낮아졌고 2005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짐. 일본도 90년대 초반까지 2~3%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0%대로 하락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요국의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sup>2)</sup>으로 추정된 자료임.

- 특히,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 이후에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OECD가 2009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2.4%와 2.2%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와 1.2%를 기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 미국과 영국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1.5%와 1.3%로 하락하였고 일본과 독일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짐

2) Hodrick-Prescott (HP) 필터링 방식은 변수를 매우 부드럽게 추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자주 사용됨.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실질GDP를  $y$ 라고 하면 HP 필터에 의해서 추정되는  $y$ 의 추세치  $y^*$ 는 최소화된 시계열값( $Min \sum (y_t - y^*_t)^2 + \zeta (\Delta \Delta y^*_t)^2$ )으로 정의되며 이때 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이 실제 시계열과 근접하게 되고, 후반부를 최소화시키면 추세선 변화율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추세선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게 됨.

·한편, 2010년 5월 발표한 자료에서 추정된 2012~2025년까지의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미국 2.3%, 일본 0.9%, 영국 1.8%, 독일 1.3%로 금융위기 이전 2006~2008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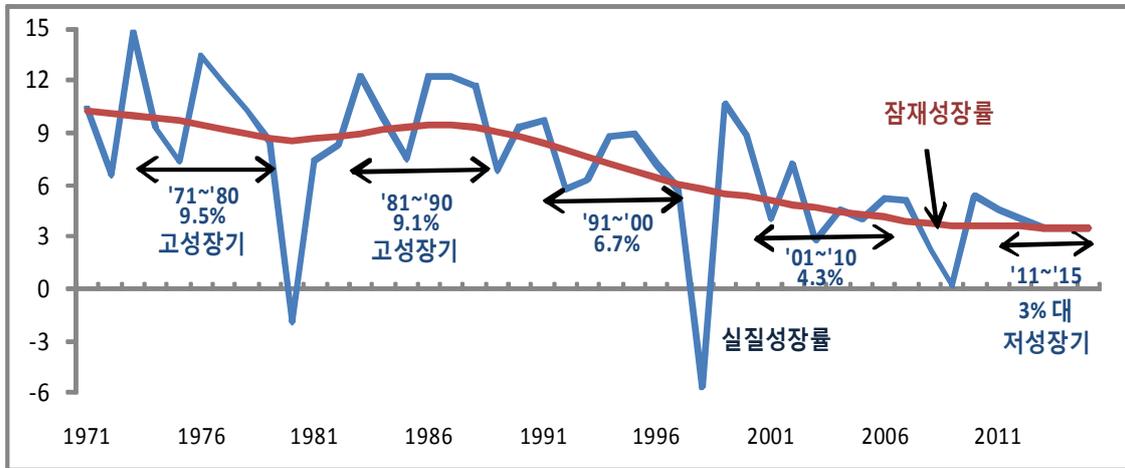
	2009년 6월 추정치			2010년 5월 추정치	
	2006~2008	2009~2010	2011~2017	2010~2011	2012~2025
OECD 평균	2.1	1.4	1.7	1.2	1.9
미국	2.4	1.5	2.0	1.4	2.3
일본	1.0	0.6	0.8	0.8	0.9
독일	1.2	0.8	1.1	1.2	1.3
영국	2.2	1.3	1.7	1.2	1.8
한국	-	-	-	4.0	2.4

자료: OECD, 2009년 6월, 2010년 5월.

○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0년 이후 3% 중반에 머물 전망

- 국내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70년대 초반 10%대에서 7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 까지 8~9%대를 유지하였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4% 후반까지 하락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IT 산업의 성장세로 5% 중후반까지 재상승
- 그러나, 2004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잠재GDP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가 이보다 더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 1980년대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0.7%p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에도 실질성장률이 이보다 0.2%p 더 낮게 나타남

<국내 실질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

2) ↔는 잠재성장률의 구간 평균치임.

- 국내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4%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한 국내 평균 잠재성장률이 80년대 7.8%에서 2004~08년 중에는 4.1%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부터 2013년 사이에는 평균 3.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80년대와 90년대 각각 평균 8.6%와 6.3%에서 2000년대 초반 4.4%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4.9%로 상승하고 2011~2020년에는 4.3%대로 재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의 국내 잠재성장률 최근 추정치>

기관	연도	'71~'80	'81~'90	'91~'00	'01~'10	'11~'15
	추정치		9.5	9.1	6.7	4.3
NABO	연도	'81~'90	'91~'00	'01~'08	'04~'08	'09~'13
	추정치	7.8	6.0	4.2	4.1	3.7
한국은행 KDI	연도	'82~'90	'91~'00	'01~'05	'06~'10	'11~'20
	추정치	8.6	6.3	4.4	4.9	4.3
대한상의	연도	'86~'90	'91~'00	'96~'00	'01~'05	'06~'09
	추정치	10.1	7.5	5.4	5.1	3.0

자료: 기관별 발표 자료 참조.

## 2. 잠재성장률 하락의 8대 원인

○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생산함수 모형에서 자본·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변화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R&D),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을 활용,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GDP( $Y_t$ )는 총요소생산성( $A_t$ ), 노동투입( $L_t$ ), 자본투입( $K_t$ )의 함수로 정의

$$* Y_t = A_t L_t^a K_t^{1-a} \text{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 노동투입은 노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인적 자본)을 고려하고, 자본투입은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자금 유입 등 자본스톡의 증감을 고려
- 총요소생산성은 산업간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금융의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등 경제시스템, 연구개발의 효율성, 사회적 자본 등의 3가지 하부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 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sup>3)</sup>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잠재성장률의 구성요소와 하락 원인>

잠재성장률 구성요소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人的 자본	- 취약한 대학교육 및 훈련시스템
	자본		- 자본수익률 하락과 국내투자 위축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내·외수 단절과 산업연관효과 하락 -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쓸림현상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 구조 고착화

3) 한상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2008.1)과 임희정('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8.3)의 연구를 참조.

1) 인구구조의 변화와 활용도 미흡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청년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 투입이 감소되고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15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성장률도 '70년의 전년대비 2.21% 성장에서 2009년 0.29%로 하락
  - 반면, 고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9년 63.5로 8.8배나 상승
  -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5년 6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9년 60.8% 기록했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에서 2030년 64%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청년·여성의 고용률 하락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는 금융위기로 더 악화
  -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2000년 60.1%에서 2009년 58.2%로 2.0%p 낮아졌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7%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열악한 상태
  -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던 여성의 고용율도 2007년 48.9%에서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2009년 47.7%로 1.1%p 하락

<인구구조 변화 통계 추이>

(단위 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p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21	0.33	0.31	0.29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25	1.19	1.15
생산가능인구 비중	54.4	62.2	69.3	71.7	71.7	72.0	72.3	72.6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55.1	59.3	63.5
경제활동참가율	57.6	55.9	60.0	61.2	61.9	61.8	61.5	60.8
청년고용률	-	-	-	60.1	61.2	60.0	59.1	58.2
여성고용률	38.2	41.3	46.2	47.0	48.4	48.9	48.7	47.7

자료: 통계청.

-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중 15~64세의 인구비중임.
3. 고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4. 청년고용률은 20~29세의 고용률로 한정하고,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 (생산성 저하) 고임금, 고비용 구조에 따라 노동비용은 상승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착화되고 있어,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성장이 한계에 도달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2.5%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3.5%, 2009년에도 3.0%로 노동비용은 증가세를 지속
- OECD에 따르면, 상대적 단위노동비용(Relative Unit Labor Costs) 지수(2005=100)도 2005년 100에서 2009년말 66.1로 떨어지면서 실질실효 가치가 크게 하락
- 반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2005년 기준)는 2006년 전년대비 8.0% 상승하였으나 점차 낮아져 2008년 말에는 3.3% 상승에 그침

2)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못 미치는 취약한 교육훈련시스템

- (취약한 교육훈련시스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적 자본의 중요성<sup>4)</sup>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의 대졸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함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은 2007년 25-34세 인구 중 56.0%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조사에서는 총58개국 가운데 46위에 그침

<대졸 인구비율 및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
대졸 비율	싱가폴 58.7%	한국 56.0%	캐나다 55.0%	일본 54.0%	대만 53.0%	독일(34위) 23.0%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싱가폴 8.26	아이슬랜드 8.04	스위스 7.95	핀란드 7.73	캐나다 7.66	한국(46위) 4.28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주: 대졸비율은 25세-34세 인구 중 대졸자의 비중. 수요충족도는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미국 10위, 독일 17위, 대만 20위, 일본 36위를 기록.

4) 인적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제조업에서는 '91~'97년중 6.5%에서 2000~2005년중 10.8%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4.6%에서 17.1%로 상승(최요철·김은영, '산업별 인적자본의 추계와 성장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2월호, 한국은행)

- (기업 교육훈련비 하락) 2000년대 들어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의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1.6%에서 '97년 1.9%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 이후 하락하여 2009년 0.6%까지 떨어짐
  -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직업훈련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

연도	1991	1993	1995	1997	2000	2003	2006	2009
비중	1.6	1.8	1.5	1.9	1.4	1.5	0.9	0.6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各年度.

주: 교육훈련비/노동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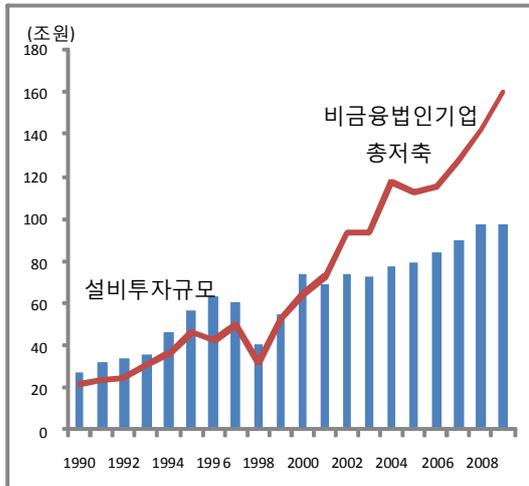
### 3)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 ○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자금 확대 등으로 국내투자는 정체

- (국내투자 위축과 자본수익률 하락)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국내 투자가 축소
  - 2001년 이후 설비투자는 오랫동안 정체된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의 총저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72조원에서 2009년 160조원으로 2.2배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1970년대 평균 14.9%에서 80년대 12.8%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며 2006~2009년 평균 증가율이 1.4%로 떨어짐
  - 특히,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평균 20%에서 2000년대 이후 평균 1%대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자본수익률이 명목기준으로 1990년대 10%에서 2000년 들어 7~8%로 떨어졌기 때문<sup>5)</sup>으로 판단됨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실물자본 수익률 추정과 시사점' 서원석 외, 2007.2.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와 총저축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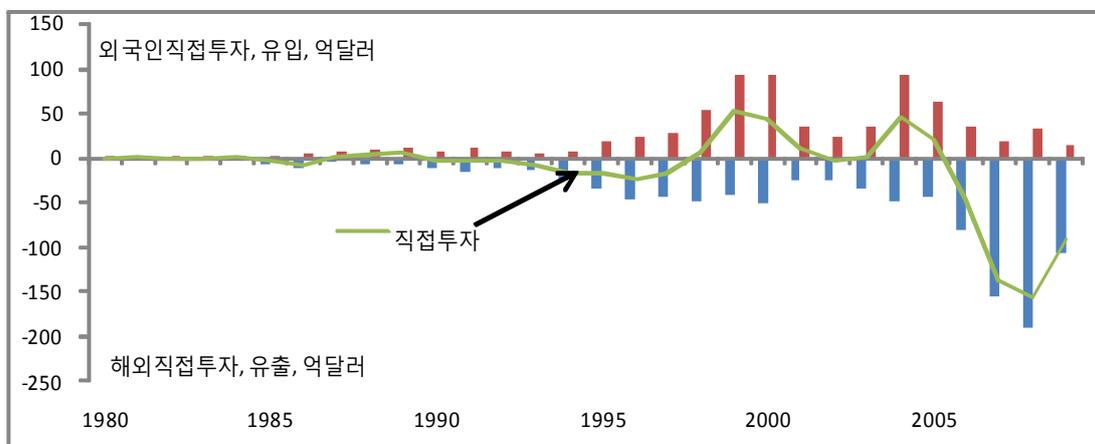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71~ '80	'81~ 90	'91~ 00	'01~ 05	'06~ 09
총고정 자본 형성	14.9	12.8	5.5	3.2	1.4
설비 투자	20.3	12.6	9.1	1.3	1.9
건설 투자	11.3	12.9	3.4	4.4	0.9

자료: 한국은행.

- (해외직접투자 자금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출되는 투자자금은 크게 증가
  - 직접투자수지는 IMF와 카드사태 시기에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 급증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
  -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IMF 이후와 카드 사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저축률 하락으로 투자재원도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라 국내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자본축적을 위축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개인 순저축률도 1996~2000년 기간 중 평균 15.5%로 전기대비 5.9%p 감소하였고, 2006~2009년 기간 중에는 평균 3.3%로 급락하여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음을 보여줌

<총저축률과 개인부문의 순저축률 평균 추이> (%)

	'75~'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9
총저축률	27.5	28.2	37.8	36.9	34.7	31.9	30.5
개인 순저축률	10.2	11.8	22.4	21.4	15.5	5.0	3.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이며, 재화와 서비스 구입(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순처분 가능소득 대비 비율임

#### 4)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 ○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에도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취업유발계수도 크게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지속 증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1990년 이후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30.3%에서 2007년 40.4%로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의 비중은 축소됨

<산업별 총생산 비중 추이> (%)

	1990	1995	2000	2005	2007
농림어업	5.1	3.8	2.8	2.1	1.8
광업	0.5	0.4	0.2	0.2	0.1
제조업	49.6	47.6	46.0	46.3	46.5
전력·가스 및 건설	12.2	11.6	9.4	9.5	9.3
서비스업	30.3	34.1	39.4	40.0	40.4
기타	2.3	2.5	2.2	2.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 (서비스업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협소) 국내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sup>6)</sup>
  - 2007년 국내 서비스업의 명목가치는 약 5,800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들 평균의 19%에 불과
  -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도 한국은 2007년 기준 55%로 주요 7개국 평균 63% 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은 미국 69%, 일본 72%, 프랑스 69%, 독일 63%, 이탈리아 63%, 스페인 59%, 영국 65% 임
  
-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거의 정체 상태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에서 2007년까지 63.9%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동기간 10.5% 증가로 거의 정체 상태
  - 특히,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90년 G7 평균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G7평균의 57% 수준에서 42%로 하락<sup>7)</sup>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달러,%)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B/A
2000	25,235	31,726	20,964	66.1
2005	29,099	43,681	22,194	50.8
2007	31,365	52,004	23,181	44.6
2000~07 평균	28,056	40,233	22,004	54.7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9.

- (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도 크게 하락) 모든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큰 폭으로 하락
  - 서비스의 생산성 저하와 제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로 취업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 자동차가 1980년 10억원당 131.2명에서 2005년 11.07명으로 반도체가 동기간 173.24명에서 7.43명, 도소매업도 316.8명에서 30.12명으로 급락

6)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시사점', 2010.6.

7)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시사점', 2010.6.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단위: 명/10억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5
자동차	131.20	72.18	45.11	23.69	14.65	11.70	11.07
컴퓨터	131.85	59.43	46.22	25.42	9.46	7.04	7.47
철강	67.64	43.49	29.61	14.58	7.34	6.89	4.31
반도체·전자부품	173.24	85.38	46.61	15.14	7.42	7.80	7.43
도소매서비스	316.76	189.49	100.78	61.74	46.08	39.68	30.12
금융·보험	171.87	89.87	51.03	35.30	15.61	11.77	10.45

자료: 한국은행.

5) 내·외수 단절 심화로 선순환 구조 약화

- (수출입 규모 확대로 대외의존도 지속 상승)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아 GDP대비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외의존도가 확대
  - 내수와 수출 비중이 1970년 각각 89.4%와 10.6%에서 '97년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내수 65.9%, 수출 34.1%로 내수가 크게 위축됨
  -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49.9%에서 IMF 외환 위기 이후 내수시장 위축으로 50~60%대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92.1%에 달하였으나 2009년말 82.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국<sup>8)</sup>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내·외수 비중과 무역의존도 추이 >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시장별	내수	89.4	77.6	78.4	77.9	71.6	71.3	65.9
	수출	10.6	22.4	21.6	22.1	28.4	28.7	34.1
무역의존도		-	-	49.9	49.0	62.4	64.6	82.4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8) 2008년말 기준으로 유럽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74.8%이며, 중국 58.0%, 일본 29.6%, 미국 23.5% 기록함.

- (내·외수 단절 심화와 부품·소재 산업의 높은 대일 의존도 지속) 높은 대외 의존도가 내수와 투자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1990년 대비 2009년도 수출은 10배 늘어났으나, 내수는 5.3배 증가에 그쳤고, 특히 수출의 성장기여도<sup>9)</sup>가 크게 높아짐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고용감축, 임금억제,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크게 약화됨<sup>10)</sup>
  - 2009년 대일 무역적자 277억 달러 중 부품·소재<sup>11)</sup> 부문만 20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상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 특히, 높은 對중국 의존도는 중국 경기 변동이 국내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쳐 국내 성장률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전체 무역흑자의 8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2009년 중국 무역의존도는 20.5%로 일본과 미국을 합한 20.1% 보다 높음
- 대외거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의 개방성(Openness)과 관련한 지표의 국가 비교에서는 여전히 하위를 기록 (아래 표 참조)

<대외 개방도 측정요인별 순위>

	전체 순위	이민법	관세율	보호주의	FDI (%/GDP)
뉴질랜드	20	17	3	5	50
아일랜드	21	1	11	3	29
영국	22	3	11	30	25
한국	23	56	53	49	52
프랑스	24	16	11	45	23
벨기에	25	6	11	33	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 9)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비와 투자 보다 높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0~2004년 평균 0.8%p에서 2005~2009년 평균 1.3%p로 확대됨.
- 10) 수출-내수 간 연계약화로 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수출은 2.4배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19% 증가에 그쳤고, 일본도 2002년 경기회복세 이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내수는 4% 증가에 그침(한국은행, '수출-내수 간 연계 약화- 독일·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외, 2007.1.)
- 11) 2001년 이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흑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전산업 무역흑자 규모를 추월하였는데, 전체 부품·소재 수출입 중 중국의 비중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2배 이상 확대된 반면, 대일 의존도는 적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비중은 점차 완화된.

<부품소재 대중 대일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일무역적자	▽105	▽118	▽139	▽161	▽161	▽156	▽187	▽209	▽201
대중무역흑자	41	54	106	159	200	198	190	135	337

자료: 지식경제부.

6)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기능 약화

- (금융 부문의 낮은 경쟁력) 국내금융은 선진국 대비 자금중개기능 약화, 은행 쏠림현상, 낮은 세계화로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낮음
  - 2000~2008년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비중은 대출이 85%를 차지하는 반면 회사채 발행(5%), 주식발행(10%)은 15%에 불과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상위 3사 은행의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가 2007년 기준 한국은 0.53으로 미국 0.34, 일본 0.46에 비해 높음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 National Index)\*지수<sup>12)</sup>는 4.3%인데 미국 24.7%, 독일 42.7%, 영국 40.3%로 주요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
  - IMD의 따르면, 국내 금융부문경쟁력은 2006년 37위, 2010년 38위로 여전히 낮음

\* TNI지수=(해외자산/총자산)+(해외수익/총수익)+(해외인력/총인력)\*100/3

- (은행의 산업지원기능 약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위주의 경영과 대기업의 내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약화는 지속되고 있어 금융-산업 간 지원기능은 약화
  - 1999년 예금은행의 대출금 중 산업대출금<sup>13)</sup>은 68.4%를 차지했으나 이후 가계 위주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도의 산업대출금 비중은 57%로 낮아짐

<예금은행의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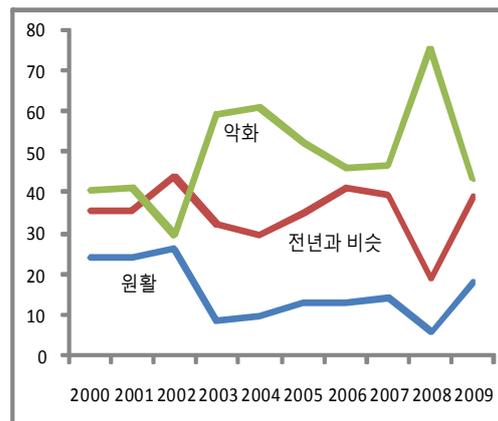
(단위: 조원, %)

	'99	'00	'03	'05	'07	'09
대출금	250.2	310.8	538.3	613.9	803.7	953.5
산업대출	171.1 (68)	201.9 (65)	284.5 (53)	308.4 (50)	440.0 (55)	544.0 (57)
가계대출	79.1 (32)	108.9 (35)	253.8 (47)	305.5 (50)	363.7 (45)	409.5 (43)

자료: 한국은행.

주: ( )는 총 대출금 대비 비중임.

<중소기업 자금조달 사정>



자료: 중소기업청.

12) 한국금융연구원 외,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2010.2.

13)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총대출금 중 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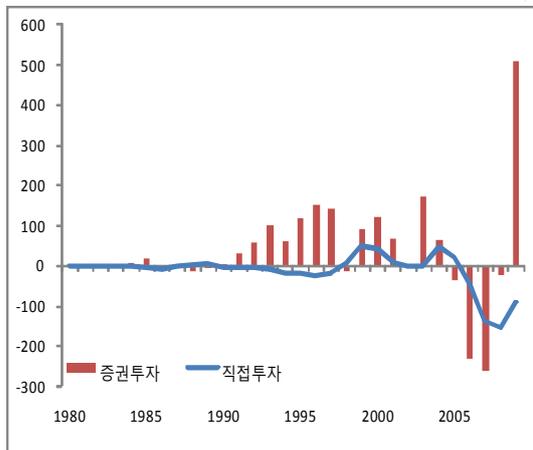
- 기업의 총자금조달 중 내부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09년말 기준 30대 기업의 현금유보율은 3,000%를 넘어서 일부 대기업은 자금 수요요인이 낮음
- 반면, 중소기업은 낮은 매출이익률 등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50%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단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
- 빈번한 단기 외국인 투기자금의 유출입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켜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sup>14)</sup>으로 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대비 28% 평가절하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도 국내 외환시장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
- 반면, 2010년 유럽재정위기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변동폭은 2010년 1/4분기 6.3%, 2/4분기 7.9% 절하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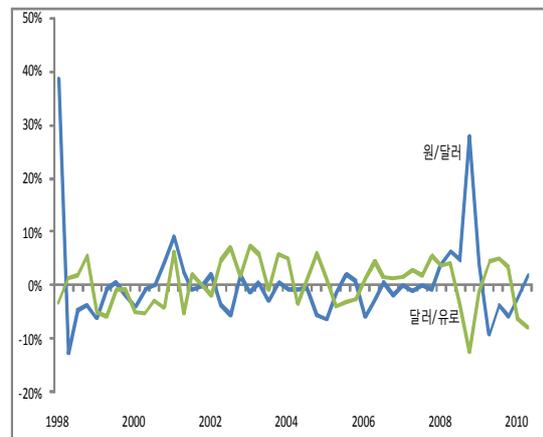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규모와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억달러)

(%)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분기별 평균자료로 전기대비 변동폭이며,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임.

14) 외환위기 이후 환율 상승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고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달러표시 수출가격 인하)와 물량효과(예:수출가격 하락→수출물량 증가) 측면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예: 환율상승→원화표시 수입가격 인상)가 증가한 반면, 물량효과(예: 수입가격 상승→수입물량 감소)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투자유발효과가 약화되었고 수입자본재 경로를 통한 환율상승의 설비투자 감소효과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용복 외, 2009.4.

7)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

- (연구개발투자비는 크게 증가)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R&D 투자규모를 꾸준히 증대시켜옴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전반적인 정체국면을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하며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됨
  - 이와 더불어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3.37%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국가 중 4위권<sup>15)</sup>임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비 추이 >

(단위: 조원,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연구개발투자비	0.01	0.2	3.2	9.4	13.8	24.2	34.5
GDP 대비 비율	0.37	0.56	1.72	2.37	2.30	2.79	3.3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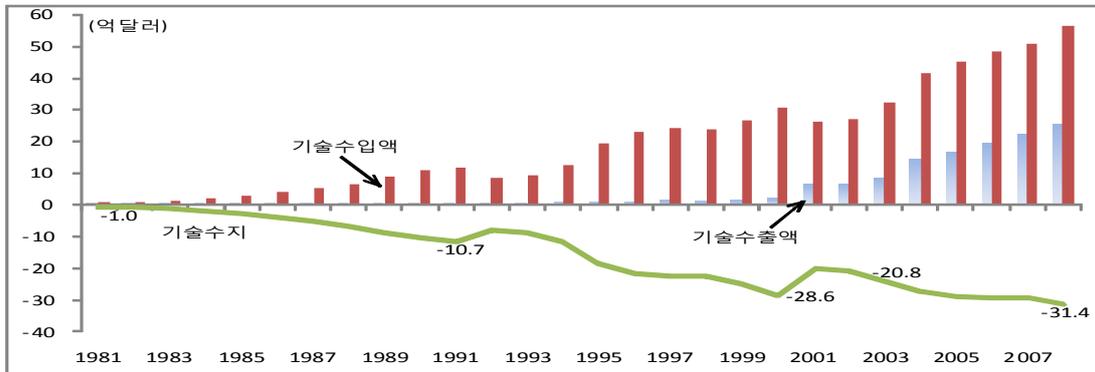
- (낮은 효율성과 쏠림현상은 확대)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R&D 투자 절대 규모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점과 쏠림현상은 개선해야 할 과제임
  - R&D 비용의 절대 규모가 미국의 1/9, 일본 1/4 수준으로 낮고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GDP대비 3극 특허건수<sup>16)</sup> 비중도 주요국 대비 낮음
  - 또한,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비중<sup>17)</sup>이 낮은 점과 기업별 R&D 투자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3대 산업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증가) 2000년대 이후 기술수출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가 확대됨
  - 기술수출액이 2000년 2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25.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기술수입액도 2000년 30.6억 달러에서 2008년 기준 56.7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가 2008년 31.4억 달러 적자로 크게 확대
  - 국가별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2007년 기준 일본 3.5배, 미국 1.8배, 독일 0.9배이나, 한국은 0.4배로 낮은 수준임

15)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따르면, 2007년말 기준 GDP대비 연구개발비중은 한국 3.47%, 미국 2.68%, 일본 3.44%, 독일 2.54%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은 2.29%임.

16)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건수.

17) 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주요국의 R&D 예산은 미국 3,688억달러, 일본 1,508억달러, 독일 842.3억 달러인데 한국은 110.9억달러로 절대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R&D 비중은 75% 수준이나 미국 71.9%, 독일 69.9% 등은 민간부문 비중이 다소 낮은 편임.

<기술무역수지 추이>



자료: OECD.

8)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

○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신뢰수준은 잠재성장률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 (부족한 사회적 자본) 세계은행(2007)의 자료<sup>18)</sup>에 따르면, 1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에서 한국은 118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며,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 평균 1인당 35만3339달러에 비해 우리는 10만7864달러로 1/3에 불과함
- (낮은 신뢰) 세계가치조사 결과<sup>19)</sup>에 의하면 1989년 이후 사회적 신뢰가 하락 추세에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신뢰수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의 신뢰수준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05년 전후 0.050으로 과거에 비해 더 커짐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변화 추이>

구분	1989	1994	1999	2005	평균
한국	0.342	0.303	0.273	0.302	0.305
전체 평균	0.339	0.250	0.285	0.289	0.289
OECD 평균	0.374	0.342	0.315	0.352	0.345

자료: 이병기(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주: 1989년은 1989-1993년 기간의 웨이브, 1994년은 1994-1998년 웨이브, 1999년은 1999-2004년 웨이브, 2005년은 2005-2008년 기간의 웨이브를 의미.

18)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19) 세계가치조사(www.worldvaluessurvey.org)는 Rosenberg(1956)에 의해 개발된 지문,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이병기(2009)).

○ 계층·기업·지역·남북간 양극화와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음

- (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소득 5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2003년 전국가구 4.44배에서 2009년 4.92로 확대되었고, 도시가구는 동기간 4.24배에서 4.94배로 격차가 더 확대됨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2인이상)	4.44	4.61	4.75	4.82	4.97	4.97	4.92
도시가구 (2인이상)	4.24	4.42	4.55	4.62	4.86	4.87	4.94

자료: 통계청.

주: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소득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기업간 격차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970년 97.1%에서 2008년 99.5%로 더욱 커짐
  -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생산지수는 2003년 14.3p에서 2009년 18.3p로 확대되었고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3년 중소기업이 18.2p 높았으나 2009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9.1p 높아지며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기업별 R&D 투자규모도 2009년 기준 대기업이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sup>20)</sup>하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미래 경영여건을 더욱 양극화시킬 수 있음

<대·중소기업간 생산 및 노동생산성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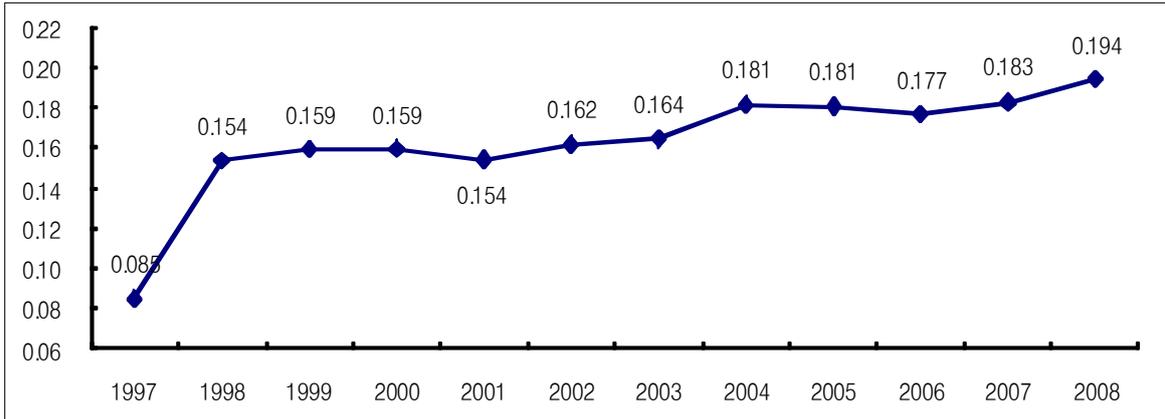
구분		2003	2005	2007	2009
생산 지수	대기업	81.2	100	118.1	125.0
	중소기업	95.5	100	112.7	106.7
노동생산성 지수	대기업	77.9	100	126.2	133.4
	중소기업	96.1	100	114.9	114.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국회 입법조사처(2010), 이슈와논점 97호 재인용).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이주량 외, 2010.7.

-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 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 집중도 심화됨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를 활용하여 지역간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2배 이상 커짐<sup>21)</sup>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가중변동계수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지역간 불균등도의 심화를 드러냄.

- (지정학적 리스크와 잠재성장률) 남북관계의 경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며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sup>22)</sup>  
·천안함 사건이 발표된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율은 이전 고점인 4월 26일 대비 13.5%, 주가지수(KOSPI)도 동 기간 중 9.2%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와 환율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임.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남북한 통일 경제로 나아갈 경우 2050년 경에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GDP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sup>23)</sup>
- (남북경협의 편익 141조 원) 1989년 이래 2008년까지 20년간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평화비용의 지출을 통해 얻은 편익은 약 141조 원으로 추정됨<sup>24)</sup>  
·1989년 이후 평화비용은 3조 9,100억 원이 지출되었으나, 144조 5,500억 원의 국방비 절약 등으로 약 141조 원의 편익이 발생

21) 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경제주평: 10-03(통권383호), 2010.1.22.

22)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현안과 과제:10-14, 2010.6.1.

23) 골드만 삭스(2009.9)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낮은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증가율,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통일 한국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함.

2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평가와 개선과제', 통일경제:09-03(통권 3호), 2009.7.31.

### 3.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까지 9%대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4%대에 이르렀으며, 2011년 이후에는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고용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하는 것이 시급함
- 따라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성장률의 구성요소별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例示)>

구성요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요소 투입	노동	量的 투입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퍼플잡(유연근무)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人的 자본	-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 및 투자확대
	자본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투자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경제자유구역 리모델링
총요소 생산성	경제시스템 (산업구조, 연관효과등)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 금융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지원기능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진입장벽 및 투자규제 완화 -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과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 - 전문 금융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능 복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연구개발 (R&D 투자 및 효율성)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성 제고	- 1등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화 - R&D 투자의 쓸림현상 해소
	사회적 자본 (신뢰, 통합 투명성 등)	- 신뢰, 공정 사회,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양극화 현상 완화와 사회통합 - 정부-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 모든 조직의 사회책임 강화 - 블루오션, 북한시장 개발 - 남북경협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3-1. 노동투입 증대

#### ○ 여성·청년·고령 인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sup>25)</sup>을 높이고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잠재성장률<sup>26)</sup>을 끌어 올릴 수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한 근무시스템 정착, 출산 후 직장복귀의 장애물 제거 등이 필요 (예: 퍼플 잡<sup>27)</sup> 활성화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정년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
  -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시스템과 ‘이민’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청년실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
  - 2010년 들어 금융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 인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과 투자 확대

- 대학교육의 특성화와 혁신을 통해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노력도 필요함
  -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니즈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과 지역별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산학연 협력을 내실화
  -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brain drain)을 최소화하고, 고급두뇌의 국내

25) 2009년말 기준 25~54세 여성고용률 59.8%(OECD)를 74% 수준으로 높일 경우 단기적으로 1인당 GDP 0.9%p 향상 (류덕현(2008) 참고)

26)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은행 前부총재는 지난 5월18일 개최된 국내 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만으로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27) 최근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퍼플 잡(purple job)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를 퍼플 칼라(purple collar)라고 부르며, 퍼플 잡(purple job)이란 단기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 근무, 재택근무 등과 같은 유연한 근무를 의미함. 또한, 퍼플(purple, 보라색)은 양성 평등과 일-가정의 조화를 상징.

- 유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구조를 구축
- 세계 100위 대학 내 진입과 이과 분야의 노벨상 프로젝트 등 수행

### 3-2. 자본스톡 증대

#### ○ 투자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FDI) 활성화

-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수치 적자가 4년 연속 지속되는 등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분야별 진입규제 완화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외국어 소통능력 제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천, 부산, 광양, 평택, 대구,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전략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3-3. 총요소생산성(TFP) 제고

#### ○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경제시스템을 고도화

-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
-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
-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에서도 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 IT제조업과 자동차산업 등 선도업종의 호황이 국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滴下(trickle-down)효과 제고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히든

- 챔피언)의 육성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강화해야,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국내 경기의 호황으로 연결 가능(☞ 滴下(trickle-down), 滴内(trickle-in)효과)
-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정비

○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과 산업의 동반성장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기여**

-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새로운 금융규제개혁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문 금융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금융허브 발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함
-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도입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자금을 장기화하고 급격한 유출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반복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이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만큼 선별적 도입이 필수적임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2등 전략에서 1등 전략으로 전환하고, R&D 투자의 쓸림현상을 해소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1등 전략, 즉 ‘스마트 리더’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sup>28)</sup>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의 쓸림현상도 해소
- 현재의 ‘스마트 팔로어’(Smart follower; 똑똑한 2등) 전략을 ‘스마트 리더’(Smart leader; 똑똑한 1등) 전략으로 전환하며, 과감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도전-실패-재도전’의 시스템을 구축
- IT산업과 자동차 등 특정산업에의 연구개발 쓸림현상을 해소하며, 농업과 전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28)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강국들의 등장과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선진국 기술의 창의적 모방과 같은 ‘2등 전략’(스마트 팔로어 전략)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으며, 과감한 도전과 1등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회 각 부문의 통합력 제고, 신뢰수준 제고,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

- 사회통합, 투명성, 신뢰, 정책의 예측성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함
-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완화와 통합력 제고를 위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지역별 거점대학의 육성과 지역특화 발전 등이 필요
- 신뢰<sup>29)</sup>, 투명성, 반부패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정부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ISO-26000)이 2010년 말에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sup>30)</sup>,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 남북한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21세기 블루오션으로서의 북한 시장 개척, 평화비용 절감 등의 장기 효과도 발휘
- 이산가족의 70% 가량이 77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

연구위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선임연구원 조호정 (2072-6217, chjss@hri.co.kr)

29) 이병기(2009)에 따르면, “신뢰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 0.5~0.8%p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함.

30) 국내에서도 최근 모 대기업 노조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노사간의 투명성 제고, 업무혁신 주도, 생태적 온전성의 유지 등 4가지 실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0.0	-4.0	-6.8	-2.6	-4.9	-0.7	1.6	5.0	3.3	3.7	2.4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0	1.0	0.2	-
일본	-1.2	-5.4	-10.0	-5.2	-16.6	10.4	-1.0	-4.1	2.4	4.4	0.4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5	11.9	10.3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5.3	8.1	7.2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8월13일	8월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63	2.58	-0.05%p
	엔/달러	90.76	96.65	92.93	86.12	86.33	0.21 ¥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769	1.2805	0.0036\$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303	10,271	-32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253	9,363	11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73	3.61	-0.12%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83.8	1,183.0	-0.8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746.2	1,775.5	29.3p

주: 8월 20일 해외지표는 전일(8월 1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8월13일	8월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5.40	74.52	-0.88\$
	Dubai	36.45	71.85	78.06	73.14	74.03	0.89\$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68.79	268.22	-0.5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